

제13대 도의회 첫 회기... 의원 5분발언 ‘눈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철화
완주전주통합 논쟁 종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 관련 대안 제시



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라며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지역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상처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논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성수 도의원 ‘전주 올림픽, 도의 회 공개 배제 안 돼’
김성수 의원(고창1)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총사업비 혼선과 경제성 분석 오류, 도의회의의 정보공유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원점 수준에서 다시 점검하고, 도의회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정부 승인 심사와 IOC 협의 상황, 개최계획과 재정부담 변화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도의회에 공유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의 기준을 마련할 것 △오는 8월 체결할 올림픽 유치 협력 협약에 주요 정책 결정 전 도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담을 것을 요구했다.

#김유민 도의원 ‘전북 미래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교육’
김유민 의원(군산5)은 교권 침해와 잦은 순환전보로 위축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성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 심리 회복, 학교 현장 지원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보육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 △지역에 정착해 장기간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남관우 도의원 ‘전북 물은 국가전략 자원... 전북 미래도 함께 설계해야’
남관우 의원(전주8)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섬진강댐 농업용수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농업용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정부의 용수 확보 계획과 물 배분 논의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 추가 용수 공급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재정 지원,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 국가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전북의 미래 산업용수 수요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서난이 도의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골든트립’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선 만큼 전북

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금융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 기조와 함께 신한금융그룹 금융허브 출범, KB금융타운 개소, 우리금융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 민간 금융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제복합금융센터 조성사업과 핀테크 종합지원센터 유치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업자가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방에서 벗어나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직접 찾아오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도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 신단·초고압 송전선로 대응 도가 직접 나서야’
유승열 의원(무주)은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하원택 도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전탑건설철폐와 전북 대책위와 약속한 정책을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며 △도지사 직속 ‘주민대변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 즉시 출범 △타 시·도와 연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전동태 도의원 ‘전통시장 화재에 방제체계 강화해야’
전동태 의원(진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율소방대 운영물품 지원 예산 확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초기 화재대응, 심폐소생술 등 월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 제도화, △소화기 화재순찰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현장 점검 체계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종복 도의원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 활용방안 찾아야’
정종복 의원(전주3)은 조직개편 영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 활용 방안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조직개편 영역과 관련해 “민선9기 도정 가치 실현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영역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와 관련해 “새만금 챔버1 대회 유치 상정이었던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이하 리더센터)가 지난 2024년 9월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기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리더센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위 출범

도의회, 서난이 위원장 선임
전북 뭉 반영 위해 본격 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9)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는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창 의원, 송재영 의원, 김주택 의원, 한준희 의원, 윤지홍 의원, 임승식 의원, 나종대 의원, 이명연 의원, 박수형 의원, 한정석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정책과 국가전략사업 추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사업 반영, 기업투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난이 위원장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요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의 성장 기회가 위축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산업융합, 항만·공항을 연계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탄소소재, 농생명·바이오 등 국가전략사업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정책과 국가전략사업에 전북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와 국가사업 유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정책과 국가전략사업에 전북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와 국가사업 유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도의원, 메가프로젝트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은 지난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북자치도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뿐만 아니라 영·호남 구도 속 호남 소외, 나아가 호남 내부에서도 국가사업이 골짜기·전남에 집중되는 이른바 3중 소외를 겪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특정 지역에만 국가사업이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용지와 전력 산업용수 등 인프라를 갖춘 미래산업의 최적지”라며, “전북이 국가 전략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선진적인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과 관련해 “더 이상 희망공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전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포함된 새로운 사업이 많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전북이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대책과 투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 신축 내년부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업무보고... 시 “2030년 완공 목표”

전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교도소 이전에 따라 생활 터전을 옮기는 자치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돼 2027년 상반기 택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서연) 업무보고에서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과 자치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은 완산구 평화동 3가 현 교도소에서 약 300m 북쪽으로 떨어진 자치마을 일원으로 교정시설을 옮기는 국책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며 총사업비는 1,874억 원(국비) 규모다.

사업 대상 면적은 교정시설 18만 7,554㎡와 진입도로 6,245㎡를 포함한 19만 3,799㎡이며 수용인원 1,500명 규모의 현대식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무부가 사업을 시행하고 전주시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법무부 공사비 1,389억원과 전주시가 담당하는 보상 및 이주대책비 475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보상비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이 노후화된 교정시설을 개선해 재소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는 물론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도소 주변 주거환경 개선과 전주 남부권 도시공간 재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2015년 이전 부지 선정 이후 201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8년 기본설계 착수, 2019년 법무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이전 부지 토지보상이 약 90% 완료된 상태다.

현재 법무부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계획이다.

이후 11월 실시 설계에 착수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7년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교도소 신축공사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다만 일부 잔여 토지의 수용재결과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토지 확보가 지연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교도소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자치마을 이주단지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는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대 한창제시장 앞) 2만여㎡ 부지에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곳에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20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전주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가구당 약 402㎡(약 140평)의 이주택지를 제공한다.

이주단지 부지 보상은 모두 완료됐으며 지난해 4월 착공한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 완료 후 자적정리와 공공시설 귀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 신축 내년부터

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2015년 이전 부지 선정 이후 201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8년 기본설계 착수, 2019년 법무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이전 부지 토지보상이 약 90% 완료된 상태다.

현재 법무부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계획이다.

이후 11월 실시 설계에 착수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7년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교도소 신축공사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다만 일부 잔여 토지의 수용재결과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토지 확보가 지연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교도소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자치마을 이주단지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는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대 한창제시장 앞) 2만여㎡ 부지에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곳에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20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전주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가구당 약 402㎡(약 140평)의 이주택지를 제공한다.

이주단지 부지 보상은 모두 완료됐으며 지난해 4월 착공한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 완료 후 자적정리와 공공시설 귀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함께 성장, 함께 성공’

김민석 당대표 지지 모임
‘전북동행’ 출범식 개최
도내 인사 500여명 결집

오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전북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적인 지지 활동에 나섰다.

김민석 당대표 지지 전북 동행 발기인 모임은 지난 16일 오후 전주시 참예우 도청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현직 지방의원과 지역 정치인, 체육인, 시민사회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행사는 전국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이 주최하고, 동창육 전 진안군의회 의장이 전북지역 준비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순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호남 발전을 위해 출한 호남인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김민석 전 총리를 민주당 당 대표로 만들어 전북 발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임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전북 발전과 민주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전북



‘김민석 당대표 지지 전북 동행 발기인 모임’은 지난 16일 오후 전주시 참예우 도청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발전과 민주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지역 지도자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호남과 전북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아 김 후보의 당선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강신성 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오래전부터 새만금과 전북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도 이산에 거주하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반드시 당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창육 준비위원장은 ‘전북동행’은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민주당의 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라며 “김민석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뜻을 담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기인 선언문을 통해 △당헌·당규를 존중하는 민주적 참여 문화 조성 △김민석 후보의 철학과 비전 공유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 강화 △공정한 시스템 공천과 통합의 민주당 실현 등을 결의했다.

전북 동행은 앞으로 권리당원 참여 확대와 정책 홍보 활동을 비롯해 토론회,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배우자 이태린 여사가 찾아와 “남편도 직접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함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함께 성장, 함께 성공’

김민석 당대표 지지 모임

‘전북동행’ 출범식 개최

도내 인사 500여명 결집

오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전북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적인 지지 활동에 나섰다.

김민석 당대표 지지 전북 동행 발기인 모임은 지난 16일 오후 전주시 참예우 도청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현직 지방의원과 지역 정치인, 체육인, 시민사회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행사는 전국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이 주최하고, 동창육 전 진안군의회 의장이 전북지역 준비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순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호남 발전을 위해 출한 호남인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김민석 전 총리를 민주당 당 대표로 만들어 전북 발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임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전북 발전과 민주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전북